

주 제

국제정보격차해소에 관한 WSIS의 주요이슈와 대응방안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원장 손연기

목차

I. 서론

II. 정보사회정상회의란?

III. 정보사회정상회의의 주요 이슈

IV. 정보사회정상회의 이후 전망

I. 서론

정보혁명으로 불리는 정보사회의 도래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배우고, 일하는 모습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인터넷의 등장으로 음성 뿐 아니라 영상, 그래픽 등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 및 쌍방향 전송이 가능케 되면서 원격교육, 전자상거래, 원격근무 등, 생활 전 분야에서 삶의 방식이 변화되었다. 정보사회의 구현으로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적 혜택이 주어졌으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건전한 콘텐츠의 유통,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 개인정보의 유출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도 발생하였다. 특히 국가 간, 계층 간 정보격차는 각국 정부 뿐 아니라 UN, OECD, UNESCO, ITU, APEC 등 국제기구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다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보격차의 문제를 비롯해 정보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세계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

민을 나누고자 정보사회정상회의(WSIS: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가 개최되었다. 2003년 12월과 2005년 11월에 각각 개최된 정보사회정상회의는 전 세계의 정상들이 모여 정보사회 발전에 대한 의제를 다룬 최초의 국제회의였다.

WSIS 이전까지는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들은 몇몇 주요 선진국이나, 지역협의체, 또는 ITU와 같은 정보통신 관련 국제기구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이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와 성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ITU가 주관하고 UN 주최로 개최된 WSIS는 이러한 맥락에서 각국 정부의 수반, UN 산하 정부간 기구, 민간부문,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정보사회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특별한 기회였으며, WSIS 참여자 모두 정보사회발전을 위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보사회 달성을 위한 글로벌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

였다.

II. 정보사회정상회의란?

1. 등장배경

정보사회정상회의의 개최는 1998년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개최된 ITU 전권 위원회(Plenipotentiary Conference)¹⁾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서 튀니지는 정보사회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회원국의 공감을 얻게 된다. 이후 2001년 ITU 이사회에서는 WSIS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 WSIS를 2차례 개최할 것을 승인하여 ITU 주관, UN 주최로 2003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05년 튀니지 튀니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ITU의 WSIS 개최 결정 이후 2001년 12월 UN 총회에서 이를 승인하였고, UN 사무총장의 후원아래 ITU가 주도적으로 WSIS를 준비하도록 결정하였으며, UNESCO 등의 UN의 관련 기구와 UN ICT Taskforce 등이 협력 및 지원을 하게 되었다.

정보사회정상회의를 승인한 UN결의안 문구를 살펴보면, 정보사회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으로 '정보통신기술 혁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 모든 나라가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긴급한 요구를 달성하기 위한 고위 정치지도자간의 합의와 몰입을 유도하고 나아가 정보사회 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을 다루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사회

정상회의의 등장은 모든 국가가 정보화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않으며, 이는 긴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2. 진행과정

1) 제1차 정보사회정상회의

제1차 WSIS는 2003년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40여 개 국가의 정상급을 포함, 각국 정부, 국제적 조직, 민간기업 및 시민단체 등에서 175개국 1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002년부터 진행된 지역회의와 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개최된 1차 WSIS 회의에서는 정보사회에 대한 공통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원칙선언문(Declaration of Principles)과 실천계획(Action Plans)을 채택하였다.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란이 많았던 표현의 자유 등 인권사항에 관련하여서는 결과적으로 미국 및 EU 등의 선진국 입장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제한 없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세계인권선언과 UN 헌장의 이념을 균등하게 반영할 것을 요구한 반면, 중국, 중동 국가 등 개발도상국은 제한적인 표현의 자유를 선호하면서 인권선언 제19조 전문 기재 시 '자국의 법체계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 조항 포함을 희망한 바 있다. 지적재산권과 사용자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미국, EU 등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조하였고, 개발도상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사용자 권리간의 균형을 주장하였으나 지적재산권 이슈는 혁신과 창조성 증진을 위해 중요하며 동시에 지식의 보급 및 공유도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합의되었다.

1) ITU 전권위원회는 4년마다 개최되는 ITU 최고회의로 향후 4년간의 예산 및 활동계획을 결정하고 필요한 헌장 및 정관을 개정한다.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이 특히 많았던 행동계획 실천을 위한 기금 신설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들은 디지털 결속기금(DSF : Digital Solidarity Fund)의 신설을 주장한 반면, 선진국들은 디지털 결속기금의 신설에 반대하며, 기존 체계 활용을 주장하여 결국 UN 사무총장 주관 하에 국제적으로 자발적인 디지털 결속기금 신설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기존 기금 체계,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2004년 말까지 수행하기로 합의하여 개발도상국이 한 발짝 양보하는 선에서 타결되었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많았던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미국, 캐나다, EU 국가 등은 기존의 ICANN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정책적인 분야에 있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제적 조직이 담당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브라질, 중국, 시리아 등은 UN 산하의 정부간 기구가 담당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결국 UN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정부, 기업, 시민단체, 정부간 기구, 국제적 조직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인터넷 거버넌스 워킹그룹(WGIG : Working Group on Internet Governance)을 구성하여 제2차 WSIS 회의의 전까지 개선 방안을 제안토록 합의되었다.

2) 제2차 정 보사회정상회의

제2차 WSIS는 2005년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튀니지 튀니스에서 174개국 정부 대표, 국제적 조직, 민간기업 및 시민단체 등에서 19,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004년부터 진행된 지역회의와 4차례의 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친 후 개최된 제2차 WSIS에서는 WSIS 결과의 수행을 위한 운영 메카니즘과 향후 계획, 인터넷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2차 WSIS에서는 특히 인터넷 거버넌스가 쟁점 이슈로 논의되었으며 사이버 보안, 스팸, 최상위 도메인 이름, IP 주소, 자국어 콘텐츠 육성 및 다국어 도메

인 이름 등의 이슈들이 모든 이해당사자들 간의 국제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합의되었으나,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체계의 개선과 국제 인터넷 회선 접속비용 이슈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그룹과 중국, 브라질 등의 개발도상국 그룹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협상과정에서 많은 난항을 겪었다. 결국, 2005년 11월 15일 열린 준비위원회 협상 마지막 회의에서 미국의 반대로 합의가 불가능한 현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 개선 이슈를 접어둔 채, 향후 논의의 지속을 위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설립에 합의하는 선에서 회의를 종결 지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튀니지 WSIS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신규기구를 창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WSIS 결과를 수행하고자 하는 개도국과 기존 유엔기구를 활용하자는 선진국의 입장이 대립하였으나, 선진국 의견이 수용되어 기존 유엔기구를 활용하기로 합의되었다. 이번 회의의 최대 관심사였던 인터넷 주소에 대한 미국의 독점적 통제권 문제는 이렇다 할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끝났으나 정보화 사회 건설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정보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각국 정부들이 계속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 졌으며, 튀니스 선언문(Tunis Commitment)과 정보사회를 위한 합의 의제(Tunis Agenda for the Information Society) 채택을 끝으로 종료되었다.

III. 정보사회정상회의의 주요 이슈

WSIS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으로는 국제정보격차해소, 인터넷 거버넌스, 정보화에 있어서의 민간기업의 역할, 표현의 자유 및 민주주의 이상실현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수용, 공개 소스 S/W 보급 및 지적재산권 보호, ICT 인프라와 비용, 평등한 접속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제2차

WSIS에서는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및 스팸, 사이버 보안, 자국어 인터넷 사용 등의 인터넷 공공 정책을 포함하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특히 미국이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인터넷 관리 통제권에 대해 중국, 브라질, 이란 및 개발도상국들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인터넷 통제권에 대한 쟁탈전이 가속화되었다.

1. 디지털 결속기금

디지털 결속기금(DSF : Digital Solidarity Fund)은 세네갈의 대통령 Wade가 '03년 2월 제 1차 WSIS 1차 준비위원회(PrepCom-1)에서 제안한 것으로 IT낙후지역에의 지원을 통하여 국제적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자는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1차 WSIS 때까지 기금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개도국과 기존의 재정지원체제만으로 충분하다는 선진국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 UNDP의 주관으로 TFFM(Task Force on Financial Mechanism)을 만들어 국가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활동 및 기존 기금의 현황을 밝히는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기금 신설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국가간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DSF의 필요성을 느낀 제네바 시장, 리옹 시장, 이탈리아 뚜린 지방 의장과 세네갈 대통령 웨이드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상회의 마지막 날(2003.12.12) 디지털 결속기금을 결성하기로 하고 재단 법인 등록을 제네바시에

두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네바시는 미화 395,000달러를 기부했고, 리옹시는 368,000달러, 세네갈은 500,000달러를 기여하여 전체 100만 유로가 결성되었고, 기금조성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미 World Summit of City and Local Authorities on the Information Society (2003.12.4 ~ 5, 리옹에서 개최)에 참여한 많은 지방정부의 지지를 받은 바 있어 지지자들을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금의 설치를 환영하는 일부 국가나 자치단체간의 합의에 의한 것일 뿐 정보사회정상회의의 공식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 후 TFFM이 보고서²⁾를 발간하고 이를 토대로 2005년 2월 개최된 제2차 WSIS 2차 준비위원회(PrepCom-2)에서 디지털 결속기금의 설립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설치에 원칙적인 합의를 하게 되었고 디지털 결속기금의 공식 출범행사가 2005년 3월 13일에 개최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식은 논의되지 않고 자발적이고,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다자 참여라는 성격, 그리고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재원의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사항 등에만 합의가 되었다. 기금의 활성화를 원하는 국가들은 기금 조성 방식으로 제네바 원칙(Geneva Principle)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공공분야 ICT 조달계약마다 1%를 기금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제네바 원칙은 디지털 결속기금에서 제정한 것으로 각국의 자발적인 동참을 호소할 수 있을 뿐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어서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기금조성이 쉽지는 않

2) The Report of the TFFM for ICT for Development (2005. 1)

동 보고서는 ICT 시장이 개방된 곳에서는 민간투자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진입장벽 제거, 공정한 경쟁, 시장 친화적인 규제와 같은 ICT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여 기존 재정지원 메커니즘의 효율성 제고를 강조하고, 수요와 재원간 적절한 연계를 위하여 지역간, 기구간, 영역간 그리고 공여국과 수혜국간 상호협력을 통한 기존 재정지원 메커니즘의 개선과 혁신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지역내 협력, 특히 디지털 협력, 후진시장(농촌 및 저소득지역)에 진입하려는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거래 비용의 절감, 보편적 접근 및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인력양성, 투자를 유인하고,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세금, 요금 수출입, 비즈니스 규제관련 정책 제정, 소규모 대출, ICT 소기업 인큐베이터, 공공산용제도 등을 통한 국제 재정지원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결속기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을 전망이다.

2. 공개소스

정보화의 진전으로 O/S 뿐만 아니라 많은 응용 도구들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영리목적의 선진국 기업이 개발할 것이어서 이를 구매하여 이용해야 하는 개도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지원으로 공공 목적의 S/W를 개발하기도 하고 UNDP와 같은 국제기구는 국제사회가 공개소스 기반의 S/W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함께 사용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반대 축에 서있는 미국은 공개소스 S/W 사용자에게 자신의 환경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소극적 차원에서 공감을 표시할 뿐 공개소스의 적극적인 도입에는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소스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 한국, 유럽 국가들에서 상당히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유엔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국제오픈소스네트워크(International Open Source Network IOSN)가 2004년 8월 28일 최초로 소프트웨어 자유의 날(Software Freedom Day) 행사를 가졌으며 이 행사 기간에는 공개소스를 알리는 CD나 책자를 보급하였으며, 다양한 오픈소스 기반의 도구들(Linux, OpenOffice, Mozilla, mySQL, Apach)도 소개되었다. 이 행사는 많은 개도국에서도 동참을 하였는데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등에서도 동시에 열렸다.

유럽, 남미 등에서도 공개소스 사용 움직임이 활발한데, 프랑스 내무장관(Renaud Dutreil)은 정부의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백만 정부 PC에 공개소스 장착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프랑스의 공개소스 S/W 개발회사인 MandrakeSoft는 프랑스의 문화,

농업, 재정부 등과 협상을 진행하였다(2004. 6.21, Reuters).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공개소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공개소스가 결코 저렴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S/W 구입비용은 저렴하나 유지관리, 그리고 사용자 교육훈련 비용을 고려하면 결코 저렴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와 동시에 개도국을 겨냥한 저가 O/S(Windows XP Starter Edition)를 출시하여 말레이, 태국,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에 보급을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그 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MS도 제품의 가격을 낮추거나 사용자에 대한 사후 관리 및 교육훈련을 무상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욱 다가가려는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개소스 S/W는 이미 유엔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자체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미국과 MS가 반대한다고 막아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양 진영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되며, 제네바/튀니지 선언문에도 공개소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선에서 문구가 합의되었다.

3.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는 협의로 보느냐 광의로 보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진다. 인터넷 거버넌스를 협의로 보게 될 경우에는 도메인 이름의 배정/IP 주소부여 및 루트 존 파일과 시스템 관리에 한정되지만 광의로 보게 되면 스펴, 보안, 지적재산권, 다국어화, 소비자 보호 등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모든 주제들이 포함될 수 있다.

1)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현재 최상위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 자원 등의 국제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는 미국 상무부와 양해각서

를 체결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비영리 민간단체인 ICANN이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 상무부는 최상위 도메인 생성, 루트 존 파일 관리 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현 도메인 이름 체계는 전 세계 13개의 루트 서버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10개 루트 서버가 미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루트 서버들은 미국 국방부에 의해 인터넷이 처음 개발된 역사적, 기술적 배경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이고 불평등하다는 다른 국가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ICANN은 이러한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해 2003년부터 22개국에 걸쳐 루트 서버의 복사본을 배치하기 시작하여 현재 34개국에 걸쳐 전체적으로 80개 서버가 운영되고 있으나 루트 서버의 통제권은 여전히 미국 상무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분산 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바로 위와 같은 미국의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인터넷 관리 체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인터넷의 관리, 감독은 UN 산하의 보다 중립적인 정부간 기구가 맡아서 모든 국가 정부가 그 역할과 책임을 공유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전 세계적인 이용확산에 따라 인터넷 주소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인터넷 주소자원이 국제적인 공공자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각국 정부들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 및 안보에 많은 영향을 끼칠 인터넷 관리 체계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이 가진 인터넷 통제권에 대한 쟁탈전은 2005년 7월 18일 인터넷 거버넌스 워킹그룹(WGIG)이 향후 국제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4가지 모델안을 UN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면서 가속화되었다.

제 1안은 기존 ICANN 조직을 해체하는 안으로 정부대표로 구성된 UN 조직의 하나로 글로벌 인터넷 위원회(GIC: Global Internet Council)를 구성하

여 현재 미 상무성이 하고있는 ICANN 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ICANN은 GIC의 감독 하에 기술 및 운영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며,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는 자문 역할만을 수행하게 된다.

제 2안은 현 ICANN 체계는 유지하면서 정부자문위원회(GAC: Government Advisory Committee)의 기능을 강화하여 각국 정부의 ICANN내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안으로, 시민단체와 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포럼 형태의 운영을 지지한다.

제 3안은 1안과 2안의 절충안으로서 ICANN내 GAC을 각국 정부대표가 참여하는 국제인터넷위원회(International Internet Council)로 대체하여 2안보다 정부의 참여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의 GAC는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나 IIC는 이사회처럼 전 세계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최상위 도메인 정보, 루트 DNS 서버 관리, IP 주소 할당 등)에 대한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제 4안에서는 현 ICANN 체계를 정책 조정, 기술 개발, 포럼을 통한 이슈 토론의 3부분으로 나누어 각 담당 조직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Global Internet Policy Council은 정부 주도로 국제 인터넷 공공 정책 이슈 및 기술 표준을 담당하며, 현 미 상무부의 감독 역할을 WICANN 내 감독 위원회를 통해 수행한다. WICANN은 민간주도로 ICANN 수행 업무와 유사한 기술적 경제적 분야에서의 인터넷 개발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를 토론한다.

WGIG의 제안은 두 번째 모델을 제외하고는 ICANN의 역할을 기술적 조정에만 한정짓고 인터넷의 통제권을 정부간 기구로 이전하는 모델들이며, 중국, 브라질 및 아랍 국가들이 이에 가세하여 미국의 인터넷 독점 관리는 신식민주의라고 비난하며 정부 주도의 인터넷 거버넌스 메커니즘 모델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던 EU 마저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일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인터넷 자원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며 미국의 배타적인 지배권에 반대하였으며, ICANN 수행 업무에 대한 감독은 모든 국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감독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미국은 현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 개편은 인터넷의 정치화, 관료화를 초래하여 인터넷의 기술적 혁신을 방해하고, 현 인터넷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인터넷 통제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아르헨티나,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이 미국 입장을 지지하였으며, 코피아난 UN 사무총장마저 UN은 인터넷을 관리할 기구를 만들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혀 새로운 인터넷 관리 체계의 실현 가능성을 어렵게 하였다.

위와 같이 인터넷 통제권에 대한 논의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입장 대립이 첨예하여 결국 합의에 실패하였으나, WGIG가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사안을 논의하는 국제적인 공간이 부재함을 지적하며 최종 보고서에서 제안하였던 포럼은 WSIS 준비위원회에서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합의되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UN 사무총장 주도로 2006년 2/4분기까지 대륙별로 다양한 이해 그룹들로 구성되어 200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첫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며, 향후 5년간 운영 후 포럼 운영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감독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현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나 조직들의 업무 영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공공 정책 이슈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주요 임무로는 다양한 국제 공공 정책을 다루는 조직들간의 의견 교환 증진, 정부간 기구들과의 협력, 정보 및 모범사례 교환을 통해 학계, 과학 및 기술 커뮤니티 전문가

들의 활용 도모, 개발도상국들의 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 중요한 인터넷 자원 관련 이슈 논의, 인터넷 사용 관련 이슈에 대한 해결책 모색 지원 등이 있다.

2) 국제 인터넷 회선 접속요금

인터넷 네트워크의 구축과 관리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며, 개인이나 기업이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이용료를 지불하고, ISP들은 국가간에 연결된 국제 인터넷회선에 대한 접속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등 사이에서의 접속 비용은 무정산 방식의 대등접속(peering)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즉, 서로 아무런 비용을 주고받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는 비용을 국내의 ISP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프라 운용 비용이 궁극적으로 최종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했을 때, 모든 한국의 이용자가 미국의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은 미국과 유럽 등의 대형 ISP에 접속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일방적인 비용분담의 근거는 미국과 유럽의 대형 ISP들을 주된 서비스 공급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발도상국의 이용자들이 선진국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정도가 그 역보다 압도적이라고 전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활용과 자국 내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를 오가는 데이터 흐름의 비중이 변화하고 있다. 선진국 이용자가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자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중국 및 호주 등은 트래픽, 즉 연결된 사업자간에 발신, 착신하는 데이터의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은 국제 인터넷 접속 시장이 매우 경쟁적인 시장이며, 따라서 시장의 논리에 근거하지 않은 정부의 인위적 규제는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도 인터넷 트래픽의 유형과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발신된 데이터가 미국 ISP를 거쳐 브라질의 이용자에게 수신된다면, 미국 내 망은 단지 경로로써 이용되었을 뿐이지만, 한국과 미국 사이에 연결된 망의 트래픽에 포함되는 것이다. 혹은 스팸 메일이나 서비스 거부 공격 등도 발신되는 트래픽에 포함됨으로써 발신지의 ISP에게 유리하게 산정되므로, 이와 같은 악의적 트래픽을 줄이려는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국가 간 불평등한 인터넷 접속 비용은 일차적으로는 ISP에게, 궁극적으로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전가된다. 사용자가 회선 사용료로 지불하는 액수 중 극히 일부분만이 국제 인터넷 접속료에 해당되므로, 각 개인에게 전가되는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 사회의 인터넷 이용률이나 보편적 서비스 환경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높아졌다.

위와 같은 불평등한 접속료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데, 중국,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개발도상국들은 국제회선 접속비용 산정이 불공평하다는 문제점을 줄곧 지적하며 개발도상국의 국제 인터넷 회선 접속비용 절감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반면에, 국제 인터넷 회선 백본망을 보유하고 회선 이용료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들은, 인터넷 회선 접속비용은 시

장 경제 체계에서 ISP간의 자율적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며, ISP간의 경쟁적, 상업적 환경 조성을 통한 국제회선 접속 비용 절감을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WSIS 논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은 기본적으로 좀 더 균형있는 국제 회선 접속비용 산정 방식 및 접속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며 경쟁적인 환경에서의 상업적인 국제회선 접속 비용 협상 증진, 초고속 인터넷 백본 네트워크 및 지역 인터넷 교환점(Internet eXchange Point, IXP) 설치, 개도국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권장, 국제 회선 접속 비용에 대한 연구 지속, 저가 터미널 장비 사용 장려, 저개발국을 고려한 상업적인 국제회선 접속비용 절감 협상 증진 등의 내용에 합의하였다.

합의 내용 중 하나인 지역 백본과 서로 다른 ISP 또는 인터넷 망간의 트래픽이 해위를 거치지 않고 상호 교환되도록 하기 위한 인터넷 연동망(IXP)이 설치될 경우 인접 국가로 보내는 인터넷 트래픽과 자국 ISP간에 발생하는 트래픽이 고비용의 국제 인터넷 회선을 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ISP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어 국가 자원의 낭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IXP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쉽게 구축될 수 있으며, 비용 절감, 신뢰성, 사용의 편의성과 속도라는 측면에서 있어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이용 환경에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아울러, 개발도상국들은 IXP 설치를 통해 지역 인터넷 트래픽 사용량 수요 취합이 가능해져 국제 인터넷 회선 접속요금 협상에서 보아 나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3) 다국어주의

정보화 사회에 있어 다국어주의에 대한 장려는 2003년 제네바 WSIS 원칙선언과 실행계획의 핵심

사항중의 하나였다. 제2차 WSIS 논의에서도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이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졌으며, 모든 참여자들이 정보화사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ICT가 인류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기반으로 정보화사회의 혜택이 전 인류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이루어진 콘텐츠 개발을 촉진하고 방대한 정보의 흐름속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관심과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비영어권 국가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질적, 양적으로 자국어 웹 콘텐츠가 부족하여 비영어권 국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정보화사회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다국어 도메인(IDN), 이메일 및 키워드 검색 등의 기술 표준 개발의 경우에도 국제 표준 마련을 위한 국가들간의 협력이 부족하여 표준 개발을 위한 중복 투자 및 기술 호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WSIS에서는 위와 같은 자국어 웹 콘텐츠 육성 및 다국어 인터넷 기술 표준 개발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의 필요성에 모든 국가들이 공감하였고, 다국어 관련 기술 개발과 국제적인 이용 확산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4) 사이버 범죄

오늘날 컴퓨터의 발달과 인터넷의 일상생활화는 우리의 삶을 극도로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있지만, 이에 부수하여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수성에서 오는 각종의 신종 범죄 또한 격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의 예로는 컴퓨터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훼손,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및 각종 불법 정보 유통, 스토킹, 마약 밀매, 매춘 알선 등 매우 다양한 사례를 들 수 있으며, 최근

에는 특히 사이버 테러, 사이버 전쟁 등의 개념으로까지 확대되어 이들 사이버 범죄가 단순한 사회적 법익을 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국가안보의 위해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2001년 컴퓨터 바이러스 확산과 인터넷 음란물 등 각종 사이버 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 사이버범죄 방지 조약이 유럽회의의 주관으로 체결되었으며, 유럽회의 회원국과 미국, 캐나다,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 조약은 각종 인터넷 범죄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각 국가가 공조를 강화하자고 명기하고 있으며, 해킹을 비롯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그리고 컴퓨터를 활용한 사기와 온라인상의 어린이 포르노물 등 여러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범죄 퇴치 국제협약은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메시지를 차단하고 서버들의 자료를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하지만, 국제 사이버범죄 방지 조약의 체결국들이 적어 전 세계적인 사이버 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간의 공조 체계 구축에는 어려움이 많아 WSIS에서는 국가 차원의 노력 및 국제협력 부족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각국 정부는 사이버 범죄의 조사와 처리를 위한 각국의 법률 제정 및 정비를 촉구하였다.

5) 스팸

스팸 메일은 인터넷이 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이다. 방대한 양의 스팸 메일은 ISP에게 있어 인터넷 접속 요금 책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최종 인터넷 이용자에게 전가된다. 특히, 스팸 메일은 낮은 인터넷 대역폭을 가진 개발도상국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에 있어 특히 심하게 나타나며, 인터넷 이용 환경이 열악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또한, 개인간의 연락 수단으로 이메일이 널리 사용되면서 광고성 스팸 메일 및 스푸핑이나 피싱의 형태를 띤 이메일 사기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과거 스팸 메일은 단지 받은 편지함을 채우는 귀찮은 존재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범죄자들이 신용카드 번호를 도용하거나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도구로까지 발전했다.

스팸은 위와 같이 인터넷의 신뢰성 및 생산성을 낮추고, 온라인 상거래의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티 스팸 소프트웨어 시장은 이미 수백만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법률 적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아랑곳 없이 스팸 발송자들은 보다 지능화되고 있다. 이메일 계정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스팸 방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스팸 메일을 전부 차단하기는 힘든 실정이며 스팸 방지를 위한 다른 이메일 계정 회사들과의 긴밀한 공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스팸 메일 발송자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나라의 서버를 통해 메일을 발송하는 관계로 소재를 파악하여 고소하는 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소모된다. WSIS에서 각국 정부들은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스팸은 국경을 초월한 문제로서 스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임을 인정하였으며, 스팸 방지를 위한 스팸 관련 교육 시행, 법률 제정, 스팸 방지 기술 개발, 모범 사례 공유, 국제 협력 등의 사안에 합의하였다.

6) 소비자 보호

인터넷을 통한 국제적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무역자유화에 따라 국제소비자거래가 급속한 증가하면서 내국인과 외국소재 사업자간 직접거래에서 발생한 피해와 분쟁이 늘고 있지만 이러한 국제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은 국가 간 소비자 보호 제도의 차이, 준거법 등의 문제로 법적, 제도적 해결이 곤란한 실정

이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비자보호기관들은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에 참여하여 국제소비자분쟁해결시스템을 가동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불만·피해를 신고할 수 있게 하였지만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해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단체들은 국제거래가 빈번한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쌍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 소비자보호 정책당국과 업체 및 소비자보호단체가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WSIS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업무 시스템 개발, 주 거래대상 국가의 소비자보호 기관과의 업무협조 관계 구축 등의 국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향후 국가 소비자 보호법 개발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에 정부들이 더욱 노력하기로 원론적으로 합의하였다.

7) 개도국의 국제 정책 개발 참여 및 역량 강화

개발도상국의 경우 재정적인 이유로 국제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고, ICT를 이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정보화 사회 구현 및 정보격차 해소에 어려움이 많기에 개발도상국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개발, 교육, 훈련을 수행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협력과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요시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들과 국제적 조직, 정부간 기구들은 개발도상국의 정보화 사회 구현과 정보격차 해소 및 효율적인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과정 참여 보장과 촉진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ICT 교육 및 훈련 등의 기본 역량 강화 지원에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IV. 정보사회정상회의의 이후 전망

정보사회정상회의는 2003년 제1차 제네바 WSIS 준비기간을 포함해 모두 4년여에 걸쳐 대장정이었으며, 1990년대 초반부터 거세게 일기 시작한 정보통신 기술과 정보사회의 봄을 전 세계의 당면 과제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특히 민간주도로 이루어져 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흐름에 각국 정부의 참여를 촉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 1차 제네바 WSIS에서 채택되었던 행동계획의 목표는 제 2차 튀니지 WSIS에서 보다 구체화되었으며, 2015년까지 모든 마을, 대학, 연구소, 도서관, 정부기관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는 목표 등에 대한 실현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각국은 2008년까지 각국의 정보화 발전계획을 담은 e-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지역적 혹은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사회 협력, 특히 개도국간 협력(south-south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의견의 교환 및 효율적이 사례의 공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 e-전략/정책의 평가 및 모니터링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아울러 '개발을 위한 ICT 측정'과 같은 노력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한국정부(KADO)와 ITU는 공동으로 Digital Opportunity Index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인프라, 기회, 이용의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며, 다시 인프라에는 네트워크와 기기, 기회요인으로는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저렴성(affordability)을 담고, 이용은 이용정도와 이용의 질로 구성하였다. 이 지수는 정보화 후발국의 정보기회 제공 장애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이들 국가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밖에도 제네바/튀니지 행동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모든 국제기구의 노력을 동참시켜야 한다고 합의되었다. 특히 ITU, UNESCO, UNDP 등 각 국제기구들이 고유의 업무 영역에 따라 특정 영역에 대한 간사역할을 맡고 그 활동 결과를 유엔사무총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합의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보사회정상회의를 통해서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필요한 많은 주제들이 이슈화되었다. 디지털 결속기금의 설치, 공개소스 및 인터넷 접속요금 이슈의 공론화, 다국어 인터넷의 활성화 및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 등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성과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특히 아프리카 개도국 입장에서는 기금의 설치만 합의되고 기금의 활동화는 요원한 일이어서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그리고 오픈 소스와 인터넷 접속 요금 등도 이슈화만 됐을 뿐 개도국에 실질적인 혜택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성과도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엄청난 반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개도국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성공이라고 자평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개도국의 요구사항을 미국 등 선진국이 반대하는 것을 선진국이 기주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선진국이 내놓은 처방도 개도국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재난 극복이나 의료 혜택 제공 등과 같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일회적인 지원으로 상당부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의 발달은 인프라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국내 산업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개도국 국내 수요자 층을 창출해야 하고, 나아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통신을 활용하겠다는 개도국 정치지도자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도국들도 선진국의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통신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정보통신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개발 등 스스로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선진국으로부터의 일방적인 지원으로는 개도국의 정보통신 발달이 요원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직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김재연(2005), WSIS와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리포트, 한국인터넷진흥원, 통권1호
- [2] 조정문(2005), 정보사회정상회의(WSIS)와 정보격차해소, 정보격차 이슈리포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통권19호
- [3]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3), 21세기 신 국제 규범(정보사회정상회의) 대응 전략연구
- [4]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s(IDN) Working Group(2001), Report of the International Domain Names Internal Working Group of the ICANN
- [5] ITU(2005), International Internet Connectivity, Are Poor Countries Subsidizing the Rich, ITU News(3)
- [6] NTIA(2005), U.S. Principles on the Internet's Domain Name and Addressing System
- [7] Task Force on Financial Mechanisms for ICT for Development(2005), The Report of the Task force on Financial Mechanisms for ICT for Development
- [8] Veri Sign(2005), The Domain Name Industry Brief 2(3)
- [9] Working Group on Internet Governance(2005),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Internet Governance



손연기

경신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학사)
미국 유타주립대 사회학과 졸업 (학사)
미국 텍사스A&M대 대학원 사회학 (석사)
미국 텍사스A&M대 (사회학박사)
한국정보문화센터 정보문화기획본부 본부장

송실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보사회학과 교수, 학과장
송실대학교 사이버연구센터 센터장
정보통신부 정책평가 및 심사위원
국무총리실 정보화 평가위원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정보문화센터 소장
제25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홍보분과위원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제26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보·커뮤니케이션분과위원
사이버명예시민운동본부 공동준비위원장
문화관광부 "2010 게임산업 전략위원회" 위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원장